

재활용 선별 잔재 쓰레기 처리 문제

현대사회의 생활계 폐기물 중 상당부분 소각 또는 매립·처리되고 있지만 재활용 가능 자원은 분리 배출되어 지자체 또는 우수 재활용 업체에서 품목별로 선별 가공후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재활용품의 일부가 원천적으로 분리 배출이 어렵거나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유입되고, 또한 선별장에서 선별되지 못한 상태의 잔재 쓰레기가 약 10~20% 가량 남게 된다.

문제는 이렇게 재활용 선별 후 발생하는 폐기물(쓰레기)의 처리 부분이다.

대부분 재활용품은 재활용업체에서 생활계 폐기물 배출자에게 돈을 주고 사온다. 그 후 자신의 전문 품목을 선별하고 나면 돌, 흙, 비닐, PVC, PP끈, PET, 야쿠르트병, 잡병등이 잔재물로 남게 된다. 이때 재활용업체는 비싼 처리비를 물고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중간 처리업체에게 이 잔재물을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여기서 재활용 수집·선별 업체는 고민을 하게 된다.

업체가 토탈 선별 시스템을 갖추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잔재물이 적게 남도록 더 세분화하여 선별하겠지만, 대다수의 고물상 또는 단일 품목의 분쇄, 파쇄, 압축 가공공장에서는 용도외의 소량의 재활용품을 더 이상 구분 선별을 한다는 자체가 무리이기 때문이다(현실적으로 쓰레기중의 품목별 소량 선별비가 판매비의 배가 되고 공간적으로도 비전문 파트의 재활용품 적재장소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적게는 돈주고 사온 쓰레기 내지 재활용품을 또다시 매입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폐기물 처리



이경규 회장
 • 대구자원(주) 대표이사
 • (사)한국자원재생활용협회 대구지역회장

해야 하는 억울함으로 인해, 불법 소각 및 매립 투기에 대한 유혹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차단하고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정부 및 지자체에서 일정한 절차(반입 허가, 또는 물량, 반입차량등)의 심사를 거쳐 허가를 제도화 한 후, 자치 단체 소각장 또는 매립장에 실비 또는 무상으로 직·반입(처리업체를 통하지 않고) 하도록 하여 주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 (현재는 수집 운반 처리업자를 통하지 않고는 반입 불가), 둘째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재활용 업체가 지자체 처리장 (소각장, 매립장)에 반입하면 지자체는 공공요원등의 힘을 빌어 한번 더 동 폐기물을 재선별하게 하여 최종 처리할 쓰레기를 줄임과 동시에 재활용율을 높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로 개선되었으면 한다.

재활용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도로써 지원해 주어야 하며, 특히 재활용 흐름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 쓰레기 처분 문제는 경제논리 보다는 폐기물 처리 개념으로 보아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